

“병상에서도 의정활동 최선” 이원택 의원, 지역발전 전인

(더불어민주당)

SNS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현장 대응 못해 지지층에 죄송”

신동진벼 퇴출 철회 · 새만금 농생명용지 신속 조성 등 막대한 역할 해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갑제·부안을)이 지난 두 달여 동안 입원상태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올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모범의정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투혼’을 발휘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의원이 최근 폐이식박을 통해 지난 2개월 동안 입원을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글을 올리면서 주변에 뒤늦게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두 달간 병원에 있으면서 최소한의 국회와 당, 지역구 활동을 수행했다”며 “지역구에 내려가서 민원과 현장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간에 전화 주시거나 그런 부분에 응대 못한 점 양해 바란다”며 “온전히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 그랬다”는 말로 지인과 지지층의 양해를 간곡히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작은 사고를 당해 목이 아프기 시작했지만 치료를 제대로 못하다가 계엄과 탄핵, 파면, 대선까지 집중

나서는 기백을 발휘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정감사와 국회활동을 통해 무분별한 수입농정의 문제점들을 집중 부각하고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전북 이전 및 농촌진흥청 도내 이전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대표적 쌀인 신동진벼를 윤석열 정부에서 보급 중단한 것을 국회활동을 통해 집중 철회하는가 하면 새만금 농생명용지 신속 조성을 비롯한 지역발전에 막대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의원은 올 상반기중 군산시 대야면 4억원과 김제시 16억원, 부안군 15억원 등 총 35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을 이끌어 내고도 지자체장과 공무원이 발품을 판 결과라며 공을 공식사회에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하다 병이 악화돼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해서 국회와 현장에 복귀한다”며 “늘 주민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의원은 그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음을 전혀 내색하지 않은데다 작년 12·3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과 파면, 대선 과정에서 몸이 아픈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국회 의정활동을 해왔다.

또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대선 과정에서 각급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소통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김윤덕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서해안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 반영을”

도의회 의원들, 김윤덕 국토부장관에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김윤덕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참석한 도의원은 서해안철도가 지나는 군산시 김동구·강태항 의원, 부안군 김경기·김술지 의원, 고창군 김만기·김성수 의원 등 6명이다.

서해안철도는 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고막원)~목포 구간으로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30)에 반영되었으나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실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해안 지자체에 국가철도망이 없다 보니 서해안 남북축 도로로 여객과 화물이 집중되어 서해안 고속도로는 늘 지체 또는 정체 상태다. 고속도로의 수송 수요를 분담하면서 동시에 수도권과 전북 서해안, 전남 서해안 지자체를 잇는 서해안 철도축을 완성한다면 새만금 활성화는 물론 서해안권 지역들의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전국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서해안권 철도망만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전국 국가교통망 자체가 균형적으로 건설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겠는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도로, 철도, 항공 정책에 있어 지역균형과 지역형평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수십 년째 과도하게 국토의 동쪽과 남쪽에만 편중된 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속해 온 것이 지금과 같은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동서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하게 했다”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2025~2035)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하루빨리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도영스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다”

공식 추모 메시지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지난 21일 공식 추모 메시지를 발표하고 “도영스님의 가르침과 자비행을 잊지 않겠다”며 “극락왕생하시기를 삼가 추모드린다”고 밝혔다.

도당은 “대한민국의 원로이자 불교계의 큰 스승이신 도영스님께서 적멸에 드셨다는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스님께서서는 한평생 화합과 상생의 길을 걸어가며 전북의 정신을 드높여 오셨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해 전통을 보존·계승

하셨으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며 자비를 실천하셨다”며 스님의 삶을 기렸다.

특히 도당은 “촛불이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다 하셨던 스님의 가르침은 전북도민에게 온 울림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도영스님의 가르침과 자비행이 전북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담원과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스님의 무량한 공덕이 세상에 회향되기를 바라며, 부디 극락왕생하시기를 삼가 추모한다”고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만호 기자

도, 미래농업 전북 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순창군 군립도서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2025 미래농업 전북포럼’을 열고, 내년 시행될 시범사업의 방향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순창군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와 실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도·시군 관계자, 전문가, 순창군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도민과 함께 이겨낸 성과”

민주 도당, 도민께 감사의 뜻 전해… “새만금 개발 속도 끌어올릴 중대한 전환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지난 21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도민과 함께 극복하고 마침내 고속도로를 완성했다”며 전북도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염영선 수석대변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사진)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기업 유치, 물류 효율성 향상, 관광 활성화 등 전북 발전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특히 이번 개통이 “전북도민에게 매우 특별한



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의원·시군의원들이 삽발과 단식 투쟁에 나서 도민의 분노를 알리고, 당 지도부와 함께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개통은 그 투쟁이 거둔 결실이라는 설명이다.

염 수석대변인은 “새만금-전주 고

속도로는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성취”라며 “앞으로도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연결,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등 핵심 인프라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염영선 도의원은 이달 14일자로 민주당 신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됐다.

21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수석대변인 임명 소식을 전한 염 의원은 “도민과 당의 가교가 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각별한 각오를 밝혔다.

전임 수석대변인인 김술지 도의원은 정청래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며 새로운 역할을 시작했다. /이만호 기자

“학교 통폐합, 속도보다는 머무를 조건이 우선”

윤영숙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교육위원회)은 지난 21일 제42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정책이 지역 소멸과 교육공무직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심장”이라며 “통폐합의 속도가 지역 주민의 삶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3월 8개교 통합 확정, 2029년까지 전교생 9명 이하 ‘아주 작은 학교’가 67개교로 늘어날 전망 등을 제시하며 지역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전담사·시설관리직 등 학교장 채용 직종의 경우 인사 교류가

불가능해 통폐합 시 과원이 발생해도 재배치가 어려운 구조적 고용 위기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학교장 채용 직종 인력 관리 체계 개편 △소규모 학교의 매력 높이는 ‘머무를 조건’ 마련 △폐교의 지역 공동체 거점 활용 및 주민 참여 강화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가장 취약한 인력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며 교육청의 신중하고 투명한 정책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자임추모공원 사태, 전북도·전주시가 적극 대책 마련을”

김정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 유가족들의 추모권 보장과 전북도·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가족의 추모권은 행정의 자비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며 “고인을 두 번 울리지 않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임추모공원은 지난해 6월 봉안당 시설 8개 호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시설 소유주와 유족들 간 분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출입 제한과 추모 시간 단축이 발생해 유가족 민원이 본격화됐다. 현재 추모



가능 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8시간)에서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 30분~4시까지로 줄여 하루 4시간 30분만 운영되고 있으며, 봉안당 규모는 6,155기, 이 중 1,802기의 유골이 회수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은 “피해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유골만 안전하게 지켜달라”며 상여를 메고 전북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약 5.1km를 행진하는 상여 시위를 벌였다. 유가족들은 도청 앞 집회에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호소하며, 고인의 유골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정상적인 추모 환경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이 제안한 첫 번째 대책은 장시법과 관련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임추모공원에 대한 ‘임시관리자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주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력한 행정지대로 출입제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은 전기요금 체납, 냉난방과 청결 상태 등 기본적인 관리가 흔들릴 경우 시설 안전 문제가 곧바로 유족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비상 안전조치를 즉시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좌절 강요 귀농·귀촌 정책, 대대적인 제도 개선 필요”

윤정훈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귀농·귀촌을 장려한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실제로는 귀농인의 손발을 묶어 좌절을 강요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무주로 귀농한 시민 A씨가 농지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신청했음에도 농협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500만원밖에 대출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거래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가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은, 행정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귀농 준비를 1년 넘게 치밀하게 해온 시민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안내와 ‘왜 공시지가가 기준인지 모르겠다’는 행정의 무감각 앞에서 결국 귀농 자체를 포기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전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

윤 의원은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째, 귀농 농업창업 자금의 경직된 상황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둘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이 각종 보조사업에서 자부담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짚었다.

셋째, 시설 지원사업의 ‘선시공 후대출’ 방식에 대해서도 “비효율적 규정 때문에 귀농인만 부담이 늘고 시공업체인 유한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계 역시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도비 지원 확대·정부 제도적 이행을”

최형열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지난 21일 제42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도비 지원 필요성과 정부의 제도적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6년간 대상포진 누적 환자가 356만 명에 달하고, 지난해에도 76만 2천여 명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예방접종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백신 종류에 따라 7만4,700원에서 42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지만, 고가의 접종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사실상 예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과거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현정부에서도 “전파성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화를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비 100% 부담 구조로 인해 지역별 지원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이만호 기자